

미래엔 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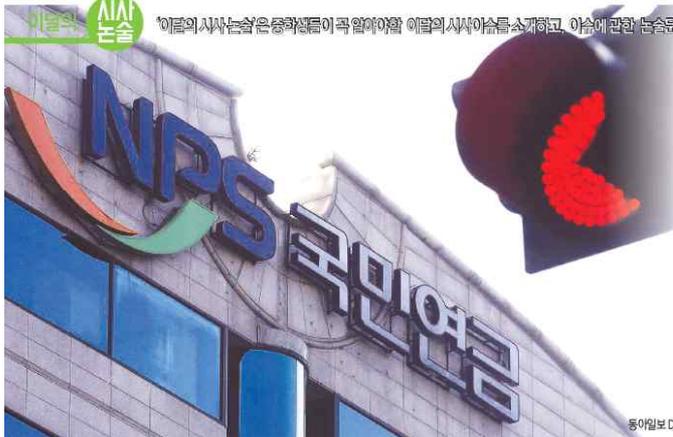
Mirae N 센터

www.m-teacher.co.kr

vol.23 | 2018년 9월호

기밀학
시시
논술

*이달의 시사논술은 중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이달의 시사이슈를 소개하고, 이슈에 관한 논술문제의 관련 교과, 참고자료, 자료집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국민연금’ 개편 두고 반대 여론 ↑, 해결책은?

난파 위기에 처한 ‘국민연금’

우리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기금이 당초 예상보다 3년 빠른 2057년경에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자신의 소득 중 일부를 보험료로 납부하였다가,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연금을 지급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소득보장제도. 특수직 종사자를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도입 30년차를 맞은 국민연금은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가입자가 2200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런 국민연금의 ‘기금고갈론’이 확산되자 “지금껏 충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 특히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매달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고, 연금 수령 연령도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도 봇물을 이루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기금고갈론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 사회가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

기금 고갈 원인? 초저출산+초고령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은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조 변화 때문. 저출산으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줄어들는데 반해,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 즉 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연금 재정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진다는 것이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은 역피라미드형 인구 구조하에서 고갈이 불가피하다. 다만 고갈 시기가 언제 인가가 문제. 정부는 5년마다 경제성장률, 인구구조 등의 변화를 따져 고갈시기를 예측한 뒤 국민연금 제도개선과 기금운용발전방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내놓는데, 5년 전 재정추계 결과에선 기금 고갈시기가 2060년으로 예측됐지만 올해 재정추계 결과 기금 고갈시기는 2057년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인 것이다. 올해 5월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634조원인데, 이 기금이 2044년까지는 계속해서 늘어 2561조원을 기록하지만 이후 고령화 등으로 기금이 줄어들기만 해 2057년경에는 고갈된다는 것(국민연금공단 자료).

상황이 이렇다보니 정부가 기금고갈시기를 늦추기 위해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13~14%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연금 수령액이 평생 월평균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해마다 조금씩 줄여 40% 수준으로 만드는 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 보험료를 내는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2세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 인구는 늘어나고,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를 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은 기금 부족해도

지급 보장되는데…” 국민 불신 ↑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고 보험료를 내는 연령도 상향조정 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앞으로 몇 십년간 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젊은 세대는 자신이 나중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더욱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 일각에선 “현재 경제 전망도 어둡고 ‘인구 절벽’이 가속화되면 앞으로도 고갈시기가 앞당겨질 것이 뻔하므로 국민연금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을 현행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그것. 독일, 스웨덴 등도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적립하는 방식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립기금이 없어지자 자연스럽게 ‘부과방식’으로 전환한바 있다. 이는 노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연금을 경제활동인구가 낸 보험료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다만 부과방식은 경제활동인구에게 노인 부양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지금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따른 국민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선 국민연금 기금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국민연금법에 못 박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쌓여 있는 돈이 나갈 돈보다 부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관련법에 ‘적자보전조항’이 명시돼 국가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 국민연금 또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에는 세금을 퍼부으면서 국민 다수의 국민연금은 부담을 올리고, 적게 받도록 하려고 하느냐”는 불멘소리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부담… 사회적 합의 도출해야

보건복지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9월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하고,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국민연금은 인구변동, 경제성장률 등 변화에 따라 보험료 수입, 기금 운용 수익률, 노령연금 지급액 규모가 달라져 계획을 잘 세우지 않으면 몇 년 뒤 또 다른 변수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국민의 실생활과 직접 연관된 부분인 만큼 개편하려면 거센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연금 보험료 9%는 일본 17.5%, 영국 21%, 미국 12.4% 등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인데,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 상승을 밀어붙이면 국민의 거센 반발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한 것. 특히 우리나라 연금 보험료는 가입자 본인과 고용주가 반반씩 부담하므로 보험료가 올라가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경제도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전문가들은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저성장 등 국민연금 재정안정성에 안 좋은 요인들이 산적한 상황에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생각해볼 문제

1.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해보자.
2.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으려면 우리 사회가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지 의견을 나눠보자.

교과서 찾아보기

사회①-11-(2)단원. 생활영역에 따른 법의

분류

사회①-12-(3)단원. 현대 사회문제

참고자료

동아일보, 2018년 8월 13일자.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올들어 0%대로 곤두박질

지도법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게 될 현 중학생들에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은 자신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이 사안을 정확하게 살펴보려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과 같은 다소 복잡한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역할과 함께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다른 나라의 사회보장제도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모두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국민연금 제도가 운영되려면, 어떠한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모둠별 토의·토론을 진행해보십시오. 이를 통해 행복하고 안전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국민,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면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이경복 경기 별내중 수석교사